

# ‘사과는 단 한명 뿐’...박원순 의혹 규명 고심에 빠진 與

### “시간 부족해 논의 못했는데”...지도부 당 차원 대응책 언급 없어 진성준 “조사 필요하지만 진실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 관련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내 ‘소신파’로 불리는 김해영 최고위원만 사과 발언을 했을 뿐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진상규명이 어려운 만큼 당 차원의 대응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시장의 장례를 놓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서

로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故) 백선엽 장군 장례에도 조문을 간 사실도 밝히면서 추모에 대한 입장을 반복했을 뿐 당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박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가해

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실제적 진실 규명에 대한 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상황에서는 고소인, 고인과 그 가족까지 다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데 마치 사실로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인권 활동가이자 3선 서울시장 업적이 있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은 삼가는 것이 도리”라고 박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언급을 비판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영 최고위원만이 시정 공백 및 고위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 최고위원은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과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장의 사망 이후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이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박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지도부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명확한 방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한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

련해서는) 시간이 부족해 논의 못했는데 얘기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 부동산 강타한 文지지를 ‘데드크로스’ 눈앞...‘경제 비전’ 돌파전

### 남북관계 악화 이어 부동산 불안에 40%대로 밀려...곧 부정평가가 앞지를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선방으로 한때 70%대까지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 50%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약제인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세하면서다. 13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7월 2주차 주중집계(6~1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1% 포인트(p) 내린 48.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오른 46.5%로 조사됐다. (이하 기사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는 5월 3주차(62.3%) 이후 7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2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긍·부정 평가는 2.2%p 차이로 좁혀지며,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6월 셋째 주(16~18일 조사) 55%를 기록해 50%대로 밀렸다. 북한이 지난 달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훈풍이 불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속도를 붙인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

령의 지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 7월 둘째 주(7~9일 조사) 국정 지지도는 직전 주보다 3%p 하락한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5%p 오른 44%를 기록해 역시 부정 평가율이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눈 앞에 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11%), ‘북한 관계’(9%),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등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로 꼽힌 것은 처음이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단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가 이난 정권 전반의 위기로 인식하고 집권 후반기 원 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

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노 실장도 지난 주 총복청주집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 집까지 처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

북한과 관련한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며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1년 간 민관 협력으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위기를 극복했음을 자축하고 ‘글로벌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등 목표를 제시했다.

##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대로 유지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 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 “100여년 동안 유지돼 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어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어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 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 온 만큼 전남도 및 어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조합위원 추천은 본회의 의결로 해야”

임종기 전남도의원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합위원 11명 중 3명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의장이 추천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은故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인천, 부산, 광양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으로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